

전환기의 韓 · 日 경제관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정 순 원*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일 양국간 경제적 긴밀도가 많이 이완되었다. 이 시점에서 양국 신정부는 과거지사에서 탈피를 그리고 엔고에 의한 새로운 분업관계 형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 글은 전환기의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의 경제 관계는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이는 무엇보다 양국에 새로운 정치지도자가 등장하여 정치개혁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양국의 경제 관계가 과거지사에 얽매인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날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신정부가 취한 중군 위안부에 대한 물질적 보상 청구 포기 선언이나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 정리 등에서 볼 때, 한국의 문민정부는 양국간에 조성된 정치적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순수한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자세를 극명히 드러내었다. 일본에서도 지난 1955년 이래 38여 년 간 일본을 이끌어온 자민당 정권이 물러가고 호소가와(細川) 수상을 중심으로한 7개 군소 정당의 연정이 집권하였다. 일본 신정부도 한일간의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바탕이 조성되었다.

* 필자는 미국의 Indiana대를 졸업(경제학박사) 하였으며, 「일본의 1970년대 금융정책」(공저), 「수입자유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공저), 「Fiscal Policy and its Consequences on Current Account Imbalances: An Exploratory Empirical Test」, 「한·일 무역관계의 재조명과 과제」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치관계 개선의 징후가 양국간 경제적 긴밀도가 점차 감소되는 과정에서 표출되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일본 수입시장 내에서 한국의 비중은 지난 1989년에 6.2%를 기록하여 미국에 이어 2위를 유지하였지만 1992년에는 5.0%로 5위의 위치로 밀려났다. 한편 우리나라 총수출 가운데 對日 비중도 1989년에는 21.6%였지만 1993년 상반기에는 13.5%로 크게 줄어들었다. 한국의 총수입 가운데 일본의 비중은 1989년에 28.5%였지만 1993년 상반기에는 23.5%로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처럼 한일간 상대방에 대한 의존도의 감소는 한국측에서보다 일본측에서 더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기술도입 측면에서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기술도입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에 72.8%에서 1980년에는 55.9%로 그리고 1993년 5월 현재에는 42.7%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편 한국을 찾는 일본인도 1991년에는 146만 명에서 이듬해에는 140만 명 그리고 금년 6월까지의 59만 8,000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가 감소하였다. 이같이 한일간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는 이완 현상을 현저히 드러내고 있다.

일본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오랜기간 동안 한국에 대한 제 1의 자본 및 기술 공여국으로서 자리를 지켜오다가 1980년대 말에 들어 對韓 경제 관계를 냉각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부메랑 효과를 우려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일인당 GNP가 1962년에 87달러였는데 1980년에 1,512달러로 20 배 늘었고, 1991년에는 6,498달러로 다시 4 배나 늘었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일본으로 하여금 산업구조나 성장패턴이 유사한 한국을 경제하도록 하기에 충분하였다. 한국으로 이전한 기술과 자본이 한국의 우수한 노동력과 결합하였을 때 일본제품과의 경쟁력 격차가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관심도 저하라고 보여진다. 1989년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빚어진 극심한 노사 분규와 임금 상승은 분업 대상으로서 한국의 매력력을 크게 감소시켰다. 나아가서 1980년대 후반 이후 한일 양국 관계 청산을 위한 양국의 '밀고 당기기식' 논쟁, 일본의 북한에 대한 급속한 관계정상화 노력, 한국과 소련의 관계 정상화와 일본 북해도에 인접한 공해상에서 한·소간 어업협력 등 일련의 사건들은 양국 관계를 소원케 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리고 한일무역 적자문제 해법에 관한 견해 차이도 양국 관계를 긴장시켰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기계류와 같은 자본재와 수출용 제품을 만들기 위한 중간재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일무역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이다. 자본재나 중간재의 수입 대체를 위해 한국은 기술이전을 일본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일본은 기술이전 문제는 어디까지나 민간부문간 협력 사항으로서 정부차원의 논의 대상이 아니며 설사 그렇게 협력한다 하더라도 기술이전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한국의 수입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을 한국측이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근에는 엔고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는 일본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한국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일본은 투자환경 개선이나 지적소유권 보호를 우선적으로 조치해줄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렇듯 얼키고 설킨 한일간 경제 관계에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8월에 「한일 경제 관계 새 발전 방향」이라는 플랜을 확정했다. 이는 양국간 신뢰 관계를 저해해온 한국측의 차별적 조치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일본 제품의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막아온 수입선 다변화 제도를 고쳤다. 현재 다변화지정 품목 수 258 개를 5년 이내에 절반 수준으로 축소시키며 나머지 절반도 일본 기업이 한국에 직접 투자케 함으로써 국내 현지 생산을 통해 수입선 다변화 제도를 사실상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과 EC에 허용해준 지적재산권 소급 보호 조치도 국내 기업의 기투자 이익 보호 등 선행조건 및 기술이전과 같은 반대급부 요구가 수용되면 일본이 요구하는 미국·EC와 동등한 수준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방침이다. 그리고 일본 기업의 대한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민관 합동 투자유치단을 지난 9월 6일에 파견하였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과감한 정책 전환과 때를 맞추어 지난 8월 30일에 열린 한일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과거지사에 얽매인 답답한 관계 유지보다는 경제적 논리에 바탕을 둔 성숙되고 합리적인 관계국의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한국은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이 양국간 산업구조의 차이라고 표명하는 등 양국 문제를 객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려 했다. 일본도 한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이전을 적극 지원하며, 관세를 인하하고 건설시장 개방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과거의 인사치레적

회담에서 보다 진일보한 진지한 자세로 전환했다.

이는 100엔 시대에 일본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분업 파트너로서 동남아보다는 한국을 더 중시한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은 EC나 NAFTA 등 그들의 주요 수출 지역에서 급진전되고 있는 경제 블록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동반자 관계를 돈독히 하지는 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ASEAN이나 미국이 이 지역에서 만들려는 경제공동체 형성에서 한국과 공동 보조를 취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

하지만, 한일 관계를 긴밀화하려는 일본의 의도는 對동아시아 관계를 능동적으로 개선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엔고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 경제의 침체 상태가 심각하고 신정부의 국내정책 조정 능력이 미지수여서 일본 수입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우리의 對日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을 단기간 내에는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이 亞·太 지역에서 군사적 개입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일본 신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정당도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 수행을 지지하고 있어서, 자연스레 강화될 일본의 목소리는 우리나라에게 대단히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특히 일본 연정에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회당이, 북한의 핵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 북일간 관계 개선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제 분업 파트너로서 남한보다는 북한에 더 무게를 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일간에는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는 분명히 성숙되고 있지만 결실을 맺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을 웅변해 주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좋은 분위기를 더욱더 고조시키고 우리 앞날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일간 과거 청산을 우리 쪽에서 서두르지 말자. 일본이 한국과 협력하여야 할 필요성은 미국·유럽 등과의 관계가 경화되고 동북아의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더욱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좀더 좋은 조건에서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자.

둘째, 한일간 기술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일본의 對韓 투자 여건도 개선시켜야 하겠지만 이와 함께 사양화되어 가는 일본 제조업의 기술인력을 적극 수입하자.

셋째, 일본에 대하여 시장 개방을 좀더 과감히 해주고 동시에 일본 시장의 개방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자. 일본 업체들은 한국인의 反日 감정이 소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 올 것이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최근 우리의 2, 3단계 유통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일본 업체들의 활발한 움직임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일 관계를 보다 합리적인 경제 관계 위에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줄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는 자세의 확립이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이라고 생각된다. ♣